

# 대법원 2015다45420 손해배상(기)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조재연)은 2018. 11. 29. [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\(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\)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, 피고\(미쓰비씨중공업\)의 상고를 기각하여,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,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](#)시켰음(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다45420 판결).

원고들과 망 김순례, 망 김복례(이하 '원고 등'이라 함)는 1944년 5월경 국민징용령,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라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임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다22549, 2009다68620 판결(관련사건 환송판결)은 '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'는 취지로 판단하였고,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선고 후 2012. 10. 24. 제기되었으며, 제1, 2심은 원고 등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였음.

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**대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**(피고가 '신일철주금 주식회사'인 사건)과 동일함.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,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'[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](#)'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음.

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하여서는,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하였음